

## 이명박 정부 조직개편안 '윤과'

재경부  
예산처  
금감위

## → 재정기획부

농림+해양수산부  
보건복지+여성부 → 통합

다음달 출범할 '이명박정부'의 정부조직도가 서서히 윤과를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열흘간의 고심 끝에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의 원칙은 공무원수를 줄이지 않되 중앙행정기관의 수는 대폭 축소하고, 정부부처의 기능을 상당부분 민간에 이양하는 대신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현행 56개의 중앙행정기관(18부·4처·17청·기타 17개)은 '대부처(大部處)주의 원칙'에 따라 13~15개 부(部)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 공직사회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13~15개 부로 축소, 기획·조정역할 강화=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산하 정부혁신·규제개혁TF는 지난 5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밤늦게까지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고했다. 이 당선인에게 보고된 이른바 '시안'은 총 10여개에 달했으나 대체로 현행 18개 장관급 정부조직을 13~15개로 정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경제부처의 경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기능을 조정해 기획재정부로 재편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부는 핵심업무인 학생선발과 학사운영 기능이 사실상 폐지되고 과학기술부 및 노동부의 일부 기능과 통폐합되며,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도 합쳐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도 통합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으며, 국정홍보처는 사실상 폐지가 확

정됐다는 게 인수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같은 '밀그림'은 그동안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돼온 여러 방안 가운데 한반도 선진화재단안(1월10부3처), 한국정책과학 학회안(2월12부5처), 행정개혁시민연대안(1월5일14부15청) 보다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안(14부3처)과 정부혁신 TF 팀장인 박재완 의원이 교수시절 발표한 조직개편 보고서가 많이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총리직 폐지, 무임소 장관 부활=이번에 보고된 정부조직 개편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부총리직이 폐지되는 대신 이른바 '무임소 장관'이 부활된다는 것이다.

현재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교육인적 자원부 장관이 겸하고 있는 부총리직은 각 관련 부처의 조정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번 조직개편에서 각 부처의 기획·조정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육상용' 개념의 부총리는 필요치 않다는 게 폐지 결정의 취지다.

'국민의정부' 출범 후 자취를 감췄던 무임소장관이 10년만에 부활해 청와대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권 초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당첨, 당진, 여야 관계를 조정하는 '정무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의 구도가 이뤄질 경우 당정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 복수의 무임소장관이 필요적이라는 인수위 내부의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인수위 국가경쟁력특위 엘든 공동위원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데이비드 엘든 공동위원장이 6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방한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규제 중복이 문제 두바이처럼 풀어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데이비드 엘든 공동위원장은 6일 "한국은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규제가 중복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엘든 위원장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외의 성공적인 금융센터의 경우 단일화된 규제와 독립적인 규제당국이 있다"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기구 회장을 겸하고 있는 엘든 위원장은 또 "두바이에 진출한 금융기관의 경우 거의 0%에 가까운 세제혜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정부와 독립적인 규제당국이 있다"며 "이는 두바이와 한국의 큰 차이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이 이러한 국제금융특별지구를 설립한다면 불가능할 것도 없다"며 "두바이의 경험에서 가장 좋았던 정책을 한국에 적용할 수 있도록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한반도 대운하와 새만금 프로젝트에 대한 외자유치와 관련 "아직 그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면서도 "다른 지역에서 활동한 개인적 경험에서 보자면 자금이 많이 필요 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수익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외국인이(엘든 위원장) 인수위에 참여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외국인 투자가 접속하고 관심을 보였다"면서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투자의향을 밝힌 해외투자자는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기업환경이 얼마나 개방되고 투명한가, 법과 경쟁원칙이 공정한가 등을 고려한다"며 "많은 투자자들은 아직 한국이 그런 여건을 갖췄는지 불확실하다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 특위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방향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해외 투자자를 많이 끌리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 내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인수위, 이달 휴대전화 요금 인하안 발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통신요금 20% 인하' 실행 방안을 이달중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인수위 경제2분과 최경환 간사위원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에서 정보통신부 업무보고 직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정통부에 1월말 까지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이동통신 및 통신비 인하계획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으며, 정통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통신요금 인하방안에는 협약 기관과 기본료, 이용료 등으로 구분된 요금체계 변경은 물론 재판매제 도입, 요금인가제 완화, 인터넷전화 활성화, 결합상품 출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 주말·휴일 인수위 업무보고... 월 주문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6일 법무부·검찰 등 정부 부처 업무보고회에서 과망·표적·기획 수사를 없애고,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준법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며, 국가정보원의 위상 재정립 등에 대한 입장장을 정리했다.

◇국세청 업무보고=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인수위는 기업 정기세무조사를 대폭 줄이는 대신에 불법, 탈법 사설을 적발한 경우 철저히 징벌하는 한편 탈세방지 시스템 구축도 적극적으로 주문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성실납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확대하고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는 한편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관리 문제와 관련해 보다 내실있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검찰 업무보고=인수위는 이날 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방식과 관련, "지나치게 포괄적인 수사를 해서 기업활동에 장애를 주는 일을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준법 마일리지 제도란 일례로 어떤 기업이 일정한 기간 무분규·무파업을 이뤄낼 경우 마일리지를 부여해 형사처벌시 감경, 신용평가나 세제상 혜택 등을 부여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내려가 불이익을 보게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거래위 업무보고=인수위는 대표적 재벌규제로 꼽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시장에 의한 자율규제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후 "기업에 대한 사전적, 직접적 규제보다는 시장자율 체제에 의해 규제될 수 있도록 사후 감시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원이 명실상부한 국가최고정보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보고 국정원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5일 국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진수희 정무분과 간사는 "이제 국정원은 명실상부한 국가최고정보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할 시점에 와있다"며 "선진화 시점에 발맞춰 미국 중앙정보부(CIA)와 같은 유수의 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업무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주문했다.

인수위는 또 대기업 집단의 자주회사 전환 환이 용이하도록 현행법상 자산총액 1천 억원이 넘는 자주회사에 적용하고 있는 ▲부채비율 200% 충족 ▲비계열 주식 5% 초과취득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등 자주회사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드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우선 현재 청와대 국정상황실,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외교통상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국가정보원'을 효율화하기 위해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기능통합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세청

### "성실납세기업 세무조사 유예 확대"

법무부·검찰

### "법 집행도 경제 살리기에 맞추라"

국정원

### "CIA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라"

‘준법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준법 마일리지 제도란 일례로 어떤 기업이 일정한 기간 무분규·무파업을 이뤄낼 경우 마일리지를 부여해 형사처벌시 감경, 신용평가나 세제상 혜택 등을 부여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내려가 불이익을 보게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를

인수위는 또 대기업 집단의 자주회사 전환 환이 용이도록 현행법상 자산총액 1천 억원이 넘는 자주회사에 적용하고 있는 ▲부채비율 200% 충족 ▲비계열 주식 5% 초과취득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등 자주회사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원 업무보고=인수위는 국가정보원

마술이란 감동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마술을 통하여 어린이에게는 꿈과 아이큐 향상을, 성인에게는 개인의 장기자랑 및 취미생활로 활용하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은 웃음을 잃은 사람에게 웃기와 꿈과 희망을 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무료교육 프로그램은 마술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사회봉사차원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좌 프로그램입니다.

### ◆ 모/집/대/상 ◆

• 유치원, 초·중등교사로서 수업에 활용하실분

• 봉사활동 및 취미로 배우시려는 주부 및 어르신

• 마술에 관심있는 초·중·고등생 및 일반인

• 소극적인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응용

• 비즈니스를 위한 영업전략에 활용하실분

• 초·중등생 게임중독치료 및 발표력 향상

• 초·중등 특기적성 마술교사로 활동하실 분(취업추천)

무료 초·중등 어린이 마술 교실 특강

마술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아이큐 향상 및

요즘 화두로 더 오르는 EQ(감성)지도수도 높여준다.

특히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활용할 수 있다.

★ 교육기간 : 주1회 8주 2개월

★ 교육비 : 무료(마술도구비 별도, 개인소장)

★ 교육장소 : 동부경찰서뒤 무등고시학원

★ 접수방법 : 선착순 20명 전화 예약 접수(개인교습)

### 순천 교육장소

연향동사거리 인스튜디오 옆 GMB영어학원 3층

문의 : (062)434-7857

★ 연말연시 각종 충년회, 동문회, 교회행사 등 각종 행사 출장 공연★

**매직&매직 아카데미 ☎(062)434-7857**

=2009년 교원임용고사 대비=

### 거울방학 교육학+전공 특강

2009학년도 새롭게 변화된 시험제도, 곧 새로운 기회!!

최고의 적중률을 자랑하는 현대교원임용 고수준과 함께 시작하세요!!

교육학 김인식 교수(작강)

개강 1월 10일(목) 10:00~19:00

초등교육 배재민 교수(작강)

개강 1월 6일(일) 13:00~19:00

유아교육 박수정 교수(작강)

개강 1월 7일(월) 15:00~21:00

국어 유광재 교수(작강)

개강 1월 5일(토) 10:00~18:00

리듬 류호강 교수(작강)

개강 1월 6일(일) 10:00~17:00

과학교육론 류호강 교수(작강)

개강 1월 5일(토) 14:00~18:00

= 공인증개시//주택관리사 합격실험회 =

매주 - (화,목) 오후 6시~(토) 오후 8시

현대고시학원

동부경찰서 옆

www.hgosi.net